

민주노총 · 진보정당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지방선거 공동요구안 및 진보단일후보 발표 기자회견

1) 개요

- 일정 : 2022. 5. 11(수) 11시
- 장소 : 프란치스코회관 211호
- 참석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노동당 나도원 공동대표, 녹색당 김예원 공동대표, 정의당 배진교 지방선거 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 주최 : 민주노총, 진보정당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2) 기조 및 취지

- 윤석열 정부 취임 직후 진행되는 지방선거에서 불평등 양당체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민주노총은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등 진보 4당과 함께 344명의 민주노총 후보 · 민주노총 지지후보를 선출하여 공동 대응하고자 합니다.
- 민주노총은 지방선거에 최대한 많은 당선자를 내어 지역정치에 새바람을 불어넣고 진보정치의 새기운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에 민주노총과 진보4당은 다음과 같이 공동요구안을 마련하였고, 특히 5대 핵심요구를 이번 지방선거에서 주요의제로 부각시킬 계획입니다.
- 공동요구안은 △노동정책을 책임지는 지방정부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지방정부 △돌봄, 의료 공공성을 책임지는 지방정부 △저임금노동자, 노동권 사각지대 노동자를 책임지는 지방정부 △기후위기-산업전환을 책임지는 지방정부 등 <5대 의제 20대 요구> 로 구성하였고, 그 중에서 5대 핵심요구로 **1) 지역노동교섭 정례화, 2) 지자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도입, 3) 돌봄시설 지자체 직접운영 확대, 4) 특고, 플랫폼노동자 사회보험 및 건강검진 지원, 5) 기후 정의 조례 제정**을 정했습니다.
- 민주노총은 110만 조합원과 진보정당 당원들, 진보개혁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기대하며 “정권교체를 넘어 불평등 체제교체”의 구호를 들고 민주노총 후보 · 민주노총 지지후보 당선을 위해 총력 투쟁할 것입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 및 보도 요청

드립니다.

3)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민주노총 전종덕 사무총장
- 기자회견 취지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 공동요구안과 진보단일후보에 대한 진보정당의 입장 : 4개 진보정당 대표
- 공동요구안 설명 : 민주노총 이정희 정책실장
- * 기자회견문 발표는 생략 (문서로 대체)

4) 핵심구호

- 진보진영 단결로 진보정치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자!
- 진보단결로 불평등-양극화체제 청산하자!
-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사회공공성을 책임지는 지방정부
- 비정규직, 일하는 사람의 노동권을 책임지는 지방정부
- 기후위기와 산업전환을 책임지는 지방정부

[붙임1] 기자회견문

[붙임2] 2022년 지방선거 민주노총·진보정당 공동요구안

[붙임3] 진보단일후보 및 민주노총 후보·민주노총 지지후보 명단

기자회견문

6·1지방선거를 진보정당의 단결과 불평등 체제전환의 새로운 출발로 만들겠습니다!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새로운 희망과 단합의 계기가 되어야 할 신정부 출범은 국민들에게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하고 있다. 지난 대통령 선거운동기간 동안 국민의 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전임정부 실정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선거운동을 일관했으며 인수위원회는 불평등,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역주행정책만을 내놓았다.

윤석열 정부의 등장은 지난 수십년동안 한국의 노동자, 민중이 피땀으로 일구어 온 사회민주화와 경제민주화의 성과를 원점으로 되돌려놓고 있다. 헌신과 희생으로 한걸음씩 전진해온 진보정치운동 또한 보수양당정치의 틈바구니에서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 주52시간제, 최저임금 무력화를 공언했으며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 인간다운 생활을 부정했다. 윤석열 당선자가 일관되게 강조한 것은 기업의 경영활동 자유이며 첫 걸음에 달려간 곳은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총, 전경련이었다. 복잡해지는 국제정세에서 미국의 이익만을 절대시하며 북에 대한 대결적 자세를 강화하여 민족의 운명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노동자, 민중의 위기, 민족의 위기를 앞두고 6.1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지방선거를 또다시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비전은 없이 보수양당간의 정쟁의 장으로 방치할 수는 없다. 민주노총과 진보정당은 6.1지방선거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지방정부, 비정규직과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권을 책임지는 지방정부, 기후위기와 산업전환을 책임지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 지방선거 공동요구안을 발표한다.

민주노총은 진보4당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과 함께 한국사회전환의 과제를 제기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보수양당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진보정당의 단결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민주노총과 진보4당은 진보후보단일화를 실현하여 진보후보의 지방정부, 지방의회진출의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진보후보의 당선을 위해 사업장과 지역에서 조합원 교육선전과 함께 진보후보의 당선을 위해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벌일 것이다. 지방선거의 성과를 토대로 민주노총은 제2의 노동자 정치 세력화, 진보정치의 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다.

민주노총과 진보4당은 6.1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 진보진영 단결로 6.1지방선거 승리하고 진보정치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자!
- 진보단결로 불평등-양극화체제 청산하자!
-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노동권을 책임지는 지방정부를 만들자!
- 사회공공성 실현, 기후위기와 산업전환을 책임지는 지방정부를 세우자!

2022년 5월 11일

민주노총-진보정당(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2022년 지방선거 민주노총 · 진보정당 공동요구안

1. 2022년 지방선거 요구안 기조

- 촛불혁명 직후 적폐청산, 사회대개혁의 요구가 반영된 2018년 선거와는 완전히 다르게 2022년 지방선거는 20대 대통령 선거 직후에 진행되는 선거로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거센 심판여론과 함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는 조건에서 치러짐
- 2020년~2022년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방역대책을 비롯한 지방정부의 다양한 노력,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등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예산에서 확인되었듯이 지방정부의 위상과 역할 갈수록 확대되어감
-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했던 노동존중 정책 중 일부가 전국화되어 지방정부 차원의 노동기본계획 수립, 노동관련 조례 제정, 각종 노동정책 추진기구 참여, 다양한 방식의 노정교섭(협의), 노동권익센터 · 비정규직지원센터 · 법률상담센터 등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등 지방정부의 노동정책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
- 생명과 안전, 노동과 복지에서 지방정부 역할이 갈수록 확대되고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지방정부에 대한 개입전략을 확대, 강화해야함. 또한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예산과 정책의 편차가 심한데, 민주노총 차원의 통일적인 사업과 요구 등이 반영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 민주노총과 진보4당은 △노동정책을 책임지는 지방정부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지방정부 △돌봄, 의료 공공성을 책임지는 지방정부 △저임금노동자, 노동권 사각지대 노동자를 책임지는 지방정부 △기후위기-산업전환을 책임지는 지방정부 등 <5대 의제 20대 요구>를 제출함.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민주노총과 진보4당은 민주노총 후보 · 민주노총 지지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특히 전략지역의 경우 반드시 당선자를 만들어내는 등 정책의제와 핵심요구안을 지방선거에서 이슈화 하고자 함

2. 2022년 지방선거 공동요구

의제	요구
① 노동정책을 책임지는 지방정부	1. 노동기본권 보장, 지방정부 행정 개혁 2. 모든 노동자 보호, 노동자 참여 보장 노동기본조례 제.개정 3. 산업단지 노동기본권 강화, 초기업 교섭 보장 4. 여성일자리, 성평등노동정책 수립
②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지방정부	1. 지자체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준수 2. 안전과 건강에 불평등 차별 없는 일터 3. 안전한 산업단지, 중소 사업장 만들기 4. 중대재해 예방, 조사, 안전관리 노동자 시민 참여 보장 5.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현장과 지역사회만들기
③ 돌봄, 의료, 교통, 교육 공공성을 책임지는 지방정부	1. 공공의료 강화·의료인력 확충 2. 돌봄정책의 국가책임 전면화, 돌봄노동자의 임금 및 처우개선 3. 공공교통 공영화와 통합적 교통체계 구축 4. 교육복지 강화
④ 비정규직, 노동권 사각지대 노동자를 책임지는 지방정부	1.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일자리의 질제고 정책 :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채용금지, 비정규직 임금격차 해소 2. 공공부문 민간위탁 사업 직영화 및 공공서비스 질 향상 3. 필수노동자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4. 노동권 사각지대 노동자 권리보장 : 특고·플랫폼, 이주, 작은사업장
⑤ 기후위기-산업전환을 책임지는 지방정부	1. 지자체별 기후정의 실현계획 수립 2. 정의로운 산업전환 및 기후재난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정교섭 3. 에너지, 건물, 교통, 농업 기후위기 대책

1) 노동정책을 책임지는 지방정부

- 경제활동인구 2,500만 명 중 2,000만명이 노동자, 국민의 절반이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를 비롯한 지방정부의 노동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음. 최근 지방정부 차원의 노동정책과 조례 제정, 노조와의 협의 등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부족함. 지자체가 기업·산업·지역별 교섭 등 단체교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법조항이 신설되었는데, 이를 구체화시켜야 할 과제도 있음. 지방정부의 노동정책을 총괄하는 부서 (국 또는 실)를 신설하고, 노동기본계획을 비롯한 조례 제정 등 전면적인 제도개선, 노동정책 수립과정에서 노조 교섭 등 노동조합과의 긴밀한 협의, 다양한 노동자 지원조직 활성화 등을 요구함

2)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지방정부

- 한해 2,400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죽고 500명이 과로사로 죽어나가는 죽음의 일터를 바꾸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었으나, 건설현장과 산업단지에서 산재사망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음. 안전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과 예산을 확대하고, 관리감독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보다는 경충을 비롯한 기업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호도하고 무력화 하는데 앞장서고 있음. 산업안전법 개정으로 지자체의 산재예방 책무가 도입된 상황을 반영해서 지역 산업단지 및 산재위험이 높은 현장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함. 지자체 소속노동자 및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현장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보다 철저히 준수하고,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장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 예방 및 조사, 안전관리에 노동자·시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함

3) 돌봄, 의료 공공성을 책임지는 지방정부

-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시장이 아닌 국가의 역할, 공공부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 다가오는 기후위기와 시대적 과제인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국가와 공공의 역할을 전면적으로 확대해야 함. 특히, 급속한 저출산과 고령화, 맞벌이 가구와 여성 경제활동인구의 증가,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확대, 감염병 위기 속에 사회서비스로서의 돌봄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돌봄의 공공성과 노동권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함. 공공병상 비중이 OECD 회원국 평균 71.4%에 크게 못 미치는 10.2%로 최하위인데 코로나 입원환자의 80%를 공공병원이 담당하고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할 때 공공병원 확충 등 의료 공공성 확대 역시 절실한 문제임. 이를 위해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국공립 시설을 확충해야 하고, 민간위탁 또는 민간에 맡겨져 있는 돌봄시설을 지방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등 돌봄과 의료의 국가책임을 전면적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함

4) 저임금노동자, 노동권 사각지대 노동자를 책임지는 지방정부

- 정부 공식 통계에서 비정규직은 사상 처음으로 800만을 돌파했고, 임금은 정규직의 53% 수준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하며 비정규직 문제를 적극 해결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에서 역설적으로 비정규직의 상황은 더욱 열악해졌고, 디지털 혁명과 코로나 비대면시대를 겪으면서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플랫폼 노동은 비정규직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음. 또한 코로나 위기는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5인미만 사업장 등 절반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안정망 사각지대에 놓여있었고, 피해가 집중됨. 근로기준법, 노조법 등 노동법조차 적용되지 않고 있는 문제, 고용과 생계의 위협에 처한 저임금노동자, 노동권 사각지대 노동자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지원대책 등이 마련되어야 함. 지방정부에서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임금차별과 적정임금 보장, 민간위탁의 직영화 전면 재검토를 통해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함. 재난시기 긴급생계비, 사회보험료 지원 등의 대책을 요구함

5) 기후위기-산업전환을 책임지는 지방정부

- 폭염과 산불, 큰비와 홍수, 가뭄과 한해 등 기상이변은 점점 더 빈발하고 기후위기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삶 전반에 현실적 위협이 되고 있음. 기후위기를 야기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서의 산업활동의 변화, 산업전환이 요청되고 있지만, 노동자들에게는 현실적으로 구조조정으로 다가오고 있음. 지자체는 기후위기, 기후재난의 일차적 대응현장이자 직접적 정책 실현 주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기후위기와 산업전환 대응은 선언적 수준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거나 중앙정부의 일방적 추진에 종속되어 있음.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자립, 친환경 교통운송체계로의 전환, 지역과 노동현장 당사자들의 실질적 참여 등 지자체 수준에서 직접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책임 역시 높여낼 필요가 있음

3. 5대 핵심요구

- 1) 지역노동교섭 정례화
- 2) 지자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도입
- 3) 돌봄시설 지자체 직접운영 확대
- 4) 특고, 플랫폼노동자 사회보험 및 건강검진 지원
- 5) 기후정의 조례 제정

1) 지역노동교섭 정례화

- 지자체의 노동정책, 노동기본조례 등에 지역본부의 전면 개입 중요
- 노조법 30조 개정사항, 지자체의 기업·산업·지역별 교섭 등 단체교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 조항 적극 활용 필요
- 노동자 생명안전, 의료·돌봄 공공성강화, 노동권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 기후위기 산업전환 등 주요의제에 대한 긴밀한 협의 필요
- 지자체의 노동자 권익보호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행정기구 개편, 노동 관련 조례 제정 등 적극 대응 필요

2) 지자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도입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산재사고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높음. 지자체도 사업주로서 산안법을 위반하거나, 지자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중대재해가 다발하고 있음
- 사업장 법 위반이 반복되고 있으나, 중앙정부 감독은 전체 사업장 대비 1%도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산재가 집중되는 소규모 사업장은 감독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음
- 지방정부의 산업안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실질 위험감소를 위해서는 노동자 참여형 산업안전감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지역 내 공공, 민간 사업장의 감독을 확대 실시하고, 감독의 내용과 현장 개선조치와 연계되도록 해야 함
- 지자체 산업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및 노동자 참여보장제도 필요 (예, 충남, 충북, 부산, 광주, 경기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3) 돌봄시설 지자체 직접운영 확대

- 국공립 시설 확대 및 직접운영 : 요양시설 30% (현행 2.8%), 어린이집 50% (현행 20.4%)으로 확대
- 신규 시설 사회서비스원 직영으로 운영
-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확충 및 규모화, 대체인력센터의 사회서비스원 직영화 및 정규 인력화, 장애인 탈시설 정책 추진 및 시설노동자 고용보장, 공공 중심 지역사회 통합 돌봄 도입

4) 특고, 플랫폼노동자 사회보험 및 건강검진 지원

-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5인미만 사업장 등 절반에 가까운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대책 절실
- 근로기준법, 노조법 등 노동법조차 적용되지 않고 있는 문제, 고용과 생계의 위협에 처한 저임금노동자, 사각지대노동자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대책 마련 필요
-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험료 중 노동자 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자체에서 지원 (예, 서울시 건설노동자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 건강검진 실시 및 비용지원 (예, 일부 지자체에서 퀵 서비스, 건설기계, 대리운전 등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건강검진을 지원,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의료센터를 개설하여 화물운동 노동자의 의료서비스 제공)

5) 기후정의 실현, 정의로운 전환 조례 제정

- 지역의 기후위기 대응, 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이행 점검, 기후 거버넌스 등을 담은 기후정의조례 제정
- 피해 당사자, 지역 주민과 노동자가 공동결정의 주체로 참여하는 민주적이고 공공적인 거버넌스 구축.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위원회 (약칭, 기후정의위원회)
- 기후위기 대응, 정의로운 전환 전담 부서 및 지원 기구 설치. 기후정의 예산 수립

[붙임3]

진보단일후보 및 민주노총 후보 · 민주노총 지지후보 명단

[1차 진보단일후보 선정 현황]

1. 전체현황

구분	정당별				무소속			계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교육감	교육의원	조합원	
민주노총 후보	2	0	38	48	3		1	92
민주노총 지지후보	5	10	66	55	4			140
계	7	10	104	103	7	0	1	232

2. 지역별 현황

관할	전체	구분		정당별 후보수				
		후보	지지후보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무소속
서울본부	45	15	30	1	2	19	22	1
인천본부	15	5	10			12	2	1
경기본부	37	17	20	1	1	15	20	
충북본부	9	2	7	1		3	4	
대전본부	11	7	4		1	3	6	1
세종충남본부	19	6	13		1	12	5	1
대구본부	12	4	8		2	6	4	
경북본부	13	4	9		1	6	5	1
부산본부	17	6	11			6	11	
울산본부	18	9	9	3		4	10	1
경남본부	26	12	14	1	2	13	9	1
강원본부	11	6	5			5	5	1
계	232	93	140	7	10	104	103	8

3. 산별 현황

산별	후보수	정당별 후보수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무소속
건설산업연맹	6	1			5	
공공운수노조	19	1		15	3	
금속노조	19			10	8	1
민주일반연맹	4			3	1	
보건의료노조	4			4		
사무금융연맹	1			1		
서비스연맹	31			1	30	
전교조	3					3
정보경제연맹	3			3		
화학섬유연맹	1				1	
직가입	1			1	0	
계	92	2		38	48	4